

요즘 부자들 '상속 대신 증여'

2017년 총 증여세 35% 증가... 평년 증가세의 수 십배 유성엽 "조손 증여 확인된 만큼, 탈세 철저히 검토해야"

지난해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세대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천6백억 수준으로 2016년 3조5천2백억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이는 이전 14년~16년 사이 총 증여세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인 증가세다.



특히,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폭증하면서,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천8백억으로 58% 증가하였고, 건수 또한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16년부터 바뀐 불기 시작한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선택이 세수로 나타났다. 설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848억에서 1조279억으로 50% 증가하였고, 증여세 역시 1천2백억에서 1천9백억으로 53% 증가하였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시 3백8십억에서 500억으로 3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고액자산 증여 증가는 경우가 미성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부자들의 '세대 거르기 증여', '조손 증여'의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부자들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상속 보다는 증여를 지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17년 전체 증여세가 갑자기 평년의 수십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고액자산 관련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세대가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손 증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조국 장관, 법무·검찰 개혁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일제 잔재 청산으로 시대 변환에 발 맞춘다

최영심 의원,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 조례 추진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소관 조례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라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에 담았다.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되었던 일제 군사제국주의의 시대 잔재로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있어 사용자 중심의 용어인 반면, '노동'은 '땀을 흘리며 일함'을 뜻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라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 등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개선팀의 명칭으로 부서가 운영 중에 있다.

최영심 의원은 "일제 잔재인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환에 발맞춰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제37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하며 동시에 국회학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해줄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조배숙 의원, "산업단지 전반의 환경요인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해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유, 폐수 등을 재자원화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른바 한국형EIP(Eco-Industrial park) 사업이 좋은 취지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태산업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7년도에는 61개 과제를 지원(개발50, 렌탈2), 총 83개 기업에게 에너지효율화 설비가 지원·적용이 됐고, 2018년 24개 과제(개발21, 렌탈2, 단지1), 총 56개 기업, 2019년 올해에는 총 3개 과제(렌탈2, 단지1) 25개 기업에게만 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2,500tCO2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이 됐고, 2018년에는 4,166tCO2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음에도, 해마다 지원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다.

사업예산 또한 2017년 18억원에서 2018년 13억원, 올해 예산은 9억원 규모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하다. 전국 총 62개 산업단지에 164개 설비가 지원이 됐으나, 경남 16개 단지에 30개 설비,

경기 10개 단지에 31개 설비, 대구 9개 단지에 32개 설비, 부산 8개 단지에 41개 설비로 특정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북에는 단 1개 설비만 지원이 됐고, 대전, 세종, 강원, 전남, 제주 경우에는 시설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향후 예산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 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기업에 단순히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산업단지 전반의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여야 정치협상회의 시작부터 삐걱... 패스트트랙 다시 '전운'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5당 대표가 사법·정치개혁을 우선 의제로 초당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이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가동기로 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불참을 시사하며 엇바지를 내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놓고 꼬인 실타래를 '고공 협상'을 통해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치협상회의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전쟁도 다시 촉발될 분위기다.

앞서 여야 5당 대표와 문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초월회' 회동에서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해 오는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기로 한 바 있다. 문 의장의 국제회의연맹(IFU)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순방 출국일(13일) 전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오늘 오전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황 대표를 제외한 4당 대표가 동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10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차원에서 11일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이같은 일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협상회의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지도 전에 잡음을 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월회 때 제가 국회의장 해외출장 이후 충분한 준비를 거쳐 그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며 "난데없이 며칠 내 하자, 준비없이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협상회의는 제1야당 대표가 빠진 채 첫 회의를 가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은 해외순방 뒤에 하게 되면 열흘이나 지나버리기 때문에 출국 전에 한번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나머지 4당 대표들은 (11일에) 다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협상회의가 '반쪽'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국회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정치·사법개혁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데 검찰개혁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날 28일째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당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동시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달 27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진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또 한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변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제2회 변산 노을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 변산 노을축제 일정

일시 / 장소	내 용
2019. 10. 11.(금) ~ 10. 12.(토) 오후 2시 - 8시 부안 변산해수욕장	· 노을 사진찍기 · 변산 노을음악회 · 승마체험 및 불꽃놀이 등

의미 부안군의회